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87
----------	-------

발의연월일 : 2022. 9. 23.

발 의 자 : 이정문 · 기동민 · 김정호
김철민 · 김홍걸 · 문진석
민형배 · 박상혁 · 신동근
안민석 · 이동주 · 이용빈
이학영 · 조승래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한 후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정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정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7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
부가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결정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 토 요청 등) ① ~ ⑥ (생략)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 토 요청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u>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 하여는</u>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 하여야 한다.	⑦ ----- ----- ----- <u>다</u>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은</u> ----- -----.
<신설> <신설>	1. <u>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u> 2. <u>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 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 인 제재부가금</u>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